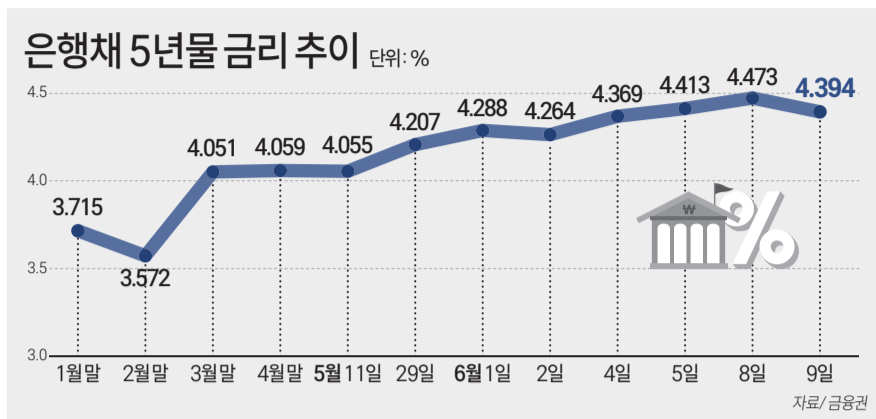


# 대출금리 재상승, 주담대 8% 찍나... 차주들 비명 커진다

美 금리 인상·한은 긴축 우려에 채권시장 금리도 오르고 있어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상승 압박



행의 자금조달과 직결되는 채권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9일 기준 3.860%로 지난달 초(3.561%)와 비교해 0.299%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장단기 조달금리도 일제히 올랐다. 고정형 주담대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4.394%로 지난달 같은기간(4.055%)과 비교해 0.339%p 상승했고, 신용대출에 영향을 주는 은행채 1년물 금리는 같은기간 3.196%에서 3.616%로 0.42%p 올랐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이

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상승 압박으로 이어진다.

채권금리는 미국발 긴축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도 시장금리를 끌어 올렸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지만 금융위원 2명이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 등을 우려하며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컨대 5억원을 50년 만기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릴 경우 금리가 연 5%일 때 상환액은 약 277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금리가 연 8%로 오르면 월 상환액은 약 386만원으로 늘어나 매달 159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더라도 대출 규모가 큰 차주일 수록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1억원을 신용대출로 빌렸을 때 금리가 연 5%에서 연 6%로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모가 큰 차주들은 금리 1%포인트 상승만으로도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대출 관리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신한금융 5조 규모 프로젝트 '포용금융 2.0 ON'

신한금융그룹은 총 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2.0 ON(ON)'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신한금융은 올 상반기 약 33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우선 소각한다. 연내 소멸시효 도래 채권까지 포함해 연간 총 5000억원 규모를 소각함으로써 장기 연체고객의 재기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장기 연체채권 576억원을 선제적으로 소각한 데 이어 약 1200억원을 추가 소각한다. 신한카드도 사망자 채권 또는 5000만원 이상 고객을 사유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8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약 1500억원을 이날 일괄 소각한다. 또한 제주은행·신한저축은행 등도 약 6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 소각에 동참한다. /나누리 기자

#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예고... 업계 "현실성 떨어져"

금융위, 중소 추심업체 난립 막아 시장 재편으로 채무자 보호 취지



Chat GPT가 생성한 매입채권추심업 관련 이미지.

금융당국이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대부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허가제 충족 요건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진입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중소 추심업체의 난립을 막고,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우량 업체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허가 요건으로는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건전한 사업 계획, 대주주 요건, 전문성 등을 제시했다. 인적·물적 요건도 강화한다. 전문인력을 포함한 20

명 이상 상시 고용 인력 및 전산 보안 설비 강화 등의 조건을 추가로 포함했다.

채무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매입채권추심업과 대출·대출중개업의 겸영도 금지한다. 매입채권추심을 위한 최소한의 부대 업무만을 허용하겠다는 방

침이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문인력 확보와 같은 인적 요건의 경우 우량 사업체조차도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10일 "오히려 자본금 30억원 등과 같은 자본 요건은 대형 업체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20인 이상 상시 고용 인력 및 변호사 등 5인 이상 전문인력 확보와 같은 인적 요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갑작스런 허들 강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겸영 금지에 관한 내용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업체가 금전대부업과 매입채권추심업, 대부광고업 등을 복수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겸영이 금지되면 기존 법인 분

리, 사업 양수 등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매입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못해도 문제다.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업체는 6개월 내로 기존 채권을 정리해야 한다. 개인채 무보호자법 제23조에 따르면 채권 등록 유효 기간이 만료됐을 시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직접적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없고 위탁 방식에서만 추심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위탁 추심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당국은 오는 8월 업계 간담회를 열고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wotis4187@

## 우리은행-KT-몽골TDB 외국인 금융 특화 3자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은 KT 및 몽골 무역개발은행(TDB)와 함께 '외국인 대상 금융·통신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광화문 KT 본사에서 이해광 우리은행 개인그룹장과 오르콘 아년 몽골 TDB 은행장, 김봉근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을 비롯한 3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한국 입국을 앞둔 몽골 국적 근로자 및 유학생이 입국 전부터 국내 정착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사는 각국의 인프라를 결합한 유기적인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몽골 현지에서 TDB를 통해 고객을 모집할 때, 향후 우리은행 해외송금 서비스와 KT 통신망 가입을 약정하면 TDB의 대출 및 예금상품에 우대혜택을 사전 반영한다. /안승진 기자

## 닥사, 12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 집중조사 돌입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회(DAXA·닥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DAXA는 지난 2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업자들이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 불법적인 가상자산 영업을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조사 결과 지난달까지 불법 장외거래소 8개, 국내영업 해외 거래소 4개 등 총

12개 업체가 특검법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의 불법영업 행위 정황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5대 거래소의 평균인 0.16% 대비 최대 62배에 달했다.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만큼, 일반적인 환전이 어려운 불법자금 이동 가능성이 크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다"라며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하나은행,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신청자 모집... 1300개 사업장 선정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오는 11일부터 3주간 신청자를 모집하며, '고효율 에너지 기기 도입 지원'과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으로 사업 분야를 나눠 총 1300개 사업장을 선정한다.

먼저, '고효율 에너지 기기 도입 지원 사업'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 향상을 희망하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1000개소를 선정해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고효율 에너지 기기 지원 사업' 품목

은 에너지 효율 1~3등급 ▲에어컨(냉난방기 포함)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세탁기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이다.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시장 진출과 매출 다변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300개소를 선정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상품 디자인 개선, 페이지 제작, 판매 전략 수립 등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방송 기획 및 인플루언서 섭외 등을 돕는 '라이브커머스 지원'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기획, 펀딩 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나누리 기자

## LH 활력타운 조성 추진 지자체 무상 컨설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상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 등을 결합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상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올해부터 공모 방식이 아닌 자율 신청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LH는 지자체별 사업 준비 시점에 맞춰 신속한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조직을 마련해 운영한다. 아울러 토지주택연구원(LHRI)과 협력해 컨설팅의 전문성도 높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